

일본의 노다 신정권과 과제

일본의 차기 총리 자리가 걸린 집권 민주당 대표 경선에서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재무상이 승리했으나 간나오토정권으로부터 떠맡게 될 적지않은 미해결 경제정책 과제와 함께 야당인 자민·공명 양당과의 협력 등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산적해있음.

□ 결선투표서 가이에다에 역전 승리

- 일본의 차기 총리 자리가 걸린 집권 민주당 대표 경선에서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54) 재무상이 승리함에 따라 30일 열리는 중의원과 참의원 본회의의 총리 지명 선거를 거쳐 제95대 총리로 지명
- 일본 민주당은 29일 오전 민주당 중의원·참의원 의원총회를 열고 당 대표 경선을 실시해 노다 재무상을 새 대표에 선출
- 노다 재무상은 1차 투표에서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郎) 전 간사장과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전 총리 그룹의 지원을 받은 가이에다 반리(海江田万里) 경제산업상에 밀렸으나 결선 투표에서 가노 미치히코(鹿野道彦) 농림수산상,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전 외무상 그룹의 지지로 역전 승리
- 5선 중의원인 노다 재무상은 와세다대학과 일본의 정치엘리트양성소인 마쓰시타(松下)정경숙 출신으로 1993년 일본신당 공천을 받아 중의원 의원이 된후 2000년 중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기고 민주당에서 2002년 국회대책위원장을 지낸 바 있음.

- 2009년 8.30 총선에서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서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내각에서 재무성 부대신(차관)을 맡았고, 작년 6월 간 나오토(菅直人) 내각이 출범하면서 재무상에 발탁
- 정책통으로 경제정책에 밝은 노다 재무상은 마쓰시타정경숙 후배인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전 외무상과 함께 민주당의 차기 대권 후보로 꾸준히 거명되어 옴.
- 현재, 노다 새 총리는 마쓰시타정경숙 출신 약 30명의 의원들로 구성되고 결속력이 매우 강한 것으로 알려진 「화제회」의 리더를 맡고 있음.

□ 새 총리의 정치·정책적 배경·입장·견해·주장

○ 원자력발전소 사고의 수습

- 국가적 도전으로서 후쿠시마를 재생. 어린이나 임산부의 방사선 피해를 방지. 방사능오염 제거를 위해 예비비 활용도 포함한 대책을 실시. 사고원인을 철저히 규명, 정보공개와 장래 예방책을 강구

○ 지진재해 부흥

- 특구제도를 활용, 고용을 창출하고 일괄 교부금을 활용. PFI(민간자금을 활용한 사회자본 정비)제도를 이용한 인프라 정비 추진

○ 에너지 정책

- 축전지, 자가발전 등에 대한 지원, 재생가능한 에너지 보급 지원, 주택 에코포인트 등의 정책수단을 총동원. 원자력안전청(가칭)을 설치. 안전성이 확인된 원자력발전을 활용하고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함.

○ 엔高 대책

- 일본은행의 금융정책과 연대하여 외환시장 개입을 포함, 단호한 조치를 강구. 예비비, 금년도 3차 보정예산을 활용하여 긴급경제대책을 마련함. 일본기업의 해외투자를 지원하는 「엔高대응긴급 패키지」를 실시하는 한편, 법인세율 5% 인하법안의 조기통과를 목표

○ 재정건전화

- 소비세 증세를 포함한 재정규율 중시론자로서 세금의 낭비를 철저히 배제하는 등 세출개혁에 전력을 기울인 후에 세입개혁을 실행

○ 희망있는 일본

- 해양과 우주, 새로운 전원생활권 구상, 글로벌인재 육성 등 세가지의 국가 100년비전을 약 1년내에 작성한다는 구상임. 중의원 수와 참의원 수를 각각 80명, 40명정도 감원. 행정쇄신 전임각료를 두고, 외교안전보장정책을 미·일동맹을 축으로 더욱 심화시켜 나감.

〈 노다 요시히코 새 총리의 정치/정책적 입장/견해/주장 〉

배경	정권틀	공약수정	원자력발전·에너지	TPP·성장·산업정책	엔高
-와세다대 졸업 -마쓰시타 정경숙 출신 -5선의원 -민주당내 주류	-여야간 협력은 필요	-과거 말한 것에 구애되어서는 여야간 협의가 불가 -이념은 건지, 완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설명해야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가동할 수 있는 것은 가동시켜야,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은 곤란	-전세계와의 경제연휴를 추진 -환경·에너지·건강·의료 분야에서 신산업 육성 -성장하는 아시아시장 활용	-과도한 변동, 투기적 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 필요

□ 미해결 경제정책 과제 산적

- 간 나오토 총리와의 버튼 터치로 물려받게 되는 미해결 정책과제는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사회보장과 조세 일체적 개혁 등 적지 않음. 이들 중요한 정책들이 백지화되는 경우 일본경제는 성장궤도에서 이탈하게 되고 그야말로 겹잡을 수 없는 수렁에 빠질지도 모름.
- 먼저 TPP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금년 6월에 농업이나 인력 이동 등을 둘러싼 국내조정을 끝내고 참가하는 방향으로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음. 그러나 대지진 발생으로 맥이 끊기게 됨.
- 작년 6월에 마무리한 신성장전략은 대담한 개혁으로서 국제경쟁력 강화가 그 핵심이었으나 이 역시 불발기미를 보이고 있음. 인프라 수출은 원자력발전 사고로 도중하차되고 법인세 감세도 실현될 전망이 서지 않고 있음.
- 연금제도 개혁은 추진력 부족에 직면. 사회보장과 조세와의 일체적 개혁은 증세에 대한 민주당내 반발로 좌절됨. 당초에는 재원으로 소비세율을 2015년도까지 최고 10%인상한다고 했으나 최종적으로는 2010년대 중반까지는 단계적으로 최고 10% 인상하는 것으로 후퇴함.
- 국회심의회가 진전되지 못한 안전도 있음. 지구온난화대책은 하토야마 정권의 온난화가스 감축목표를 이어받았으나 관련법안이 통과되지 못함. 국민신당이 요구한 우정민영화 개혁도 논의가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고 있음. 정권 기반의 약화와 함께 민주당의 핵심 정책도 표류하고 있음.

□ 향후 정치일정 및 야당과의 협력

- 야당은 지난 8월 25일, 31일에 있을 이번 정기국회 폐회 후 9월 상순을 염두에 둔 임시국회 소집을 여당측에 요구 함. 정권 운영의 방향 설정을 모색하는 동시에 신임 총리 를 견제하려는 목적에서임.
- 자민·공명 양당은 동일본 대지진재해의 복구·부흥에는 협 력하는 한편,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국회에서 여당측과 정 정책대결을 벌 이려 하고 있음.

< 간 나오토 정권이 남겨놓은 주요 경제정책 과제 >

항목		당초방침과 현황	전망
세재정	법인세 감세	2011년도 세제개정법안이 답보상태	부흥재원의 논의와도 관계, 앞으로 여야간 협의여하에 달려 있음.
	공무원 인건비	5월에 정부와 조합측이 공무원 인건비 약 10%삭감에 합의	여야당내에서 반발로 법안심 의에 들어갈 전망은 보이지 않고 있음
성장전략·구조개혁	TPP	당초는 6월 교섭참가를 판단, 지진으로 보류, 국내조정은 정 체상태	확대교섭 9개국은 큰 틀에 대 한 합의를 목표, 일본의 참가 는 불투명
	우정민영화	우정민영화노선을 수정하는 개혁법안은 자민당의 반발로 좌절	국민신당이 조기통과를 요구하고 있으나 신정권과 자민·공명 양당간 거리감 여하에 달림
부흥	고속도로 무료화	6월 전국 50개구간에서 실시 하고 있던 무료화 실험을 동결	2012년도 예산편성에서도 무 료화 요구는 하지 않음
	금융기능 강화	개정 금융기능강화법 통과, 피해금융기관에 대한 공적자금 활용조건 등을 대폭 완화	공적자금 투입 개시는 빨라야 9월
에너지·원 자력 발전	에너지기본계획 수정	간 수상이 백지수정을 표명, 논의의 장인 심의회는 아직 열 리지 않음	금년 가을에라도 논의를 개시, 내년 각의 결정을 목표
	원자력발전사고 배상	원자력발전소사고 배상지원기 구를 설립, 동경전력의 배상을 지원하는 법률은 통과	기구설립, 이사장 선출은 9월 이후
사회보장	주부 년금문제	후생성이 새로운 구제안을 마련했으나 책임주급이 두려워 법안제출을 보류	임시국회 제출을 준비중
	유·보(유치원+ 보 육원)일체화, 양육 관련 신제도	이번 국회에서 법제화할 예정 이었으나 법안제출을 연기	법안제출 전망이 서지않은 상태

- 자민·공명 양당은 노다 새 총리가 제창한 대연립에는 원칙적으로 응하지 않을 태세임. 민주당 신체제와의 정책협의를 거쳐 어디까지나 각외로부터 복구·부흥 등의 분야에서 협력한다는 것이 기본 전략임.

○ 협력 여부 모색

- 자민·공명 양당이 임시국회 조기소집을 고집하는 것은 민주당 메니페스토의 주요 정책수정 등에 관한 신임 총리의 기본적인 태도를 국회에서 명확히 하도록 하는데 그 의도가 있음. 또한 본격적인 부흥책을 담을 금년도 3차 보정예산 안 등에 대한 협력가능여부를 모색하려는 의도도 있음.

○ 중의원해산·총선 시나리오

- 자민당은 3차 보정예산 통과후에 중의원해산·총선거로 정권을 되찾겠다는 전략임. 다만, 이것은 중의원 선거제도의 개혁논의 문제 등도 안고 있어 금년중 해산에는 공명당과 그리고 자민당 일부에서도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음.
- 자민당으로서는 금년중 중의원해산·총선거가 여의치 못할 경우, 2012년도 예산안이 통과되는 내년 3월 이후 시점에 에서 중의원 해산·총선을 요구할 가능성이 큼.

□ 노다 신정권과 한·일관계

- 총리의 권한과 영향력이 제한적인 일본의 정치풍토를 감안하더라도 어떤 인물이 일본의 수장을 맡느냐에 따라 한·일관계의 방향과 흐름이 영향을 받을 개연성은 적지 않음.

- 노다 새총리는 야스쿠니(靖國)신사에 합사된 2차 세계대전의 A급 전범을 '전쟁범죄자가 아니다'고 주장하는 등 역사 문제에서 극우적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일각에서는 노다 새 총리의 이같은 우익적 성향으로 인해 독도와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전향적이지 못한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있고 한·일관계가 험난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의 시각도 나오고 있음.
- 한편, 친중파로 알려진 가이에다 반리 경제산업상과는 대조적으로 노다 새 총리가 미·일 동맹을 중요시하고 있는 배후에는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려는 중국위협론이 자리잡고 있다는 분석도 가능함. 이에 따라 동북아 역내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한·미·일 3각 동맹을 중시하는 쪽으로 정책좌표를 설정할 가능성도 있음.
- 다만, 이와 같은 새 총리의 성향이 한·일경제관계, 특히 중요한 현안으로 중단 상태에 있는 한·일FTA, 나아가 한·일간 경제협력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보는 것은 어디까지나 추측이고 속단에 불과

〈참고자료〉

日本經濟新聞 외, 각종 포털사이트